

ESG
[ESG] 2026년 기점으로 달라질 ESG, 제2의 재무제표가 된다면?

2026년 기점으로 달라질 ESG, 제2의 재무제표화에 대비할 시기

ESG는 더 이상 선택적인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ESG 공시의 법적 의무 시행 및 '제2의 재무제표'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오류는 곧 재무 리스크이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발생 시점부터 재무 및 법무와 연계된 '설명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귀사는 ESG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공급망 ESG 활동 3년 연속 증가, 협력사 공급망 관리 중요성 대두

공급망 ESG 활동이 3년 연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협력사 ESG 평가 체계 보유 여부, 평가 결과의 계약·거래 반영, 협력사 개선 지원, 공급망 탄소(Scope 3) 관리 구조 등 '관리 수준' 중심의 항목이 이미 실질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ESG 공시 의무화·공급망 실사 규제의 점검 리스트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프랑스·영국·독일 등 해외 그린워싱 판정 기준 비교와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은?

공정위 제재가 촉발한 지배구조 리스크, ESG 평가 하락으로 이어져

PROPOSED BILL
최신 개정·발의안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무상할당 비율 도입과 판단 기준의 전환

스튜어드십 코드, ESG 이슈 개선 요구 및 이행 점검 포함해 전면 개정 논의

GLOBAL & LOCAL TRENDS
국내외 주요 동향

EU,CSRD와 CSDDD 등 ESG규제 완화 및 연기 발표

EU CBAM 적용 품목,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 함유 하류제품 포함돼

중대재해-ESG 가이던스, 핵심 내용 정리와 해외의 산재 관련 ESG 동향

INSIGHTS
언론 속 대륜

로이슈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오는 1월 30일, 공정거래·ESG·ISO를 한자리에서 진단하는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통합 워크숍'이 열립니다. 대륜과 한국준법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와 하도급 리스크 관리, ESG 정부 지원 전략 등 내년 기업 경영의 핵심 변화를 선제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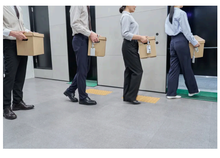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임원배상책임보험(D&O), 경영 리스크의 '만능 방패' 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으로 '임원 리스크의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성장 중인 D&O 보험은 경영진에게 유일한 법적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대륜의 오경훈 변호사가 '임원의 생존 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짚었습니다.

한국경제



'65세 정년', 빨리 먹으려다간 탈 난다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세 사이 '5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숙련 인력의 지속 활용이 필수지만, 기업 부담과 세대 갈등 우려도 큽니다. 불가피해진 정년 연장,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명확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과 정교한 입법 설계가 필수임을 지적합니다.

CONTACT

윤형윤 경영총괄변호사 T. 070-7510-1118

박동일 경영총괄변호사 T. 070-5221-3616

이일권 경영총괄변호사 T. 070-7510-1822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1046

손계준 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김대길 선임변호사 T. 070-7510-1820

법무법인(유한)대륜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